

[토론회]

혐종의 색안경을 벗고,  
중국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팩트체크 방법론

2022년 9월 28일(수) 오후3시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언론개혁시민연대 | 팩트체크넷

## 혐중의 색안경을 벗고, 중국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팩트체크 방법론

한국과 중국은 수교를 맺은 이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수교 30주년을 맞는 지금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더욱 나빠졌다. 사드 사태, 한한령을 비롯한 일련의 갈등과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10년 사이 반중정서가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반중정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표현을 만나는 일이 흔하게 될 정도로 반중정서가 일상의 영역까지 뿌리를 내렸다.

한국의 반중정서는 이제 대중정책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만큼 양국관계의 커다란 변수가 되었다. 시민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심각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반중정서가 아시아에 대한 폭력과 증오범죄의 형태로 표출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조선족 등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반중 정서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복잡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소통의 왜곡과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가 한중간 갈등을 확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언론연대는 지난 해 한국 언론이 반중정서를 증폭하는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지난 연구에 이어 올해는 중국 연구자, 전문가와 함께 한중간 올바른 정보 유통과 교류를 위한 팩트체크 방법론을 탐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중국 전문가 및 언론인들과 함께 중국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저널리즘 방법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토론회 행사 개요]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요일) 오후3시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사회**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발표** : 1) 혐중의 증폭을 막기 위한 저널리즘 방법론 : 김동찬/권순택 (언론연대)

2)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 언론미디어 독해법 : 홍명교 (플랫폼C)

### **토론**

- 박동찬 이주인권활동가      -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

- 신정아 한신대 강사      -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자료집 목차]

## 혐증의 색안경을 벗고, 중국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팩트체크 방법론

1. 혐증의 증폭을 막기 위한 저널리즘 방법론\_\_\_\_\_ 4

사례1) 조선족 범죄\_\_\_\_\_ 5

사례2) 중국인 특혜\_\_\_\_\_ 16

사례3) 문화공정\_\_\_\_\_ 29

2.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 언론미디어 독해법\_\_\_\_\_ 45

---

# 혐종의 증폭을 막기 위한 저널리즘 방법론

---

발표\_ 권순택 언론연대  
김동찬 언론연대

## 사례1. 조선족 범죄: 오원춘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매체에서 '조선족'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범죄와 특혜 논란이다. 다양한 매체에서 반중 정서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 2012년 4월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을 꼽고 있다. 한국사회 내 조선족에 의한 피해와 공포심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이에 오원춘 사건에 대한 당시 보도를 중심으로 조선족에 관한 언론보도를 살펴봤다.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존재하거나 반중정서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내용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또한 언론보도 중 하나의 기사를 선정해 팩트체크에 기반을 둔 인권 관점으로 기사를 재구성, 독자들이 '조선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볼 때 유의해야할 점들을 제시했다.

### 오원춘 사건이란

2012년 4월, 경기남부에서 오원춘이 퇴근하던 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살해 뒤 피해자를 '토막' 내는 등 잔혹했다는 점과 피의자가 '조선족'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수 많은 언론보도가 양산됐다. 커뮤니티에서는 오원춘이 '인육'을 즐겼고 그것이 중국의 그릇된 문화라는 허위정보가 퍼졌으며, 그 시기 채널A 등 주요 매체에서도 인육 관련 실태 보도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피해 여성은 납치된 상태에서 112를 통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구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컸다. 이와 함께 경찰의 책임 회피를 위한 잦은 '거짓말'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불명예 사퇴했다.

### 오원춘 사건 관련 당시 언론보도의 양상과 문제

#### ① '조선족' 제목을 통해 부각시키는 보도

10대 중앙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지상파 3사(KBS, MBC, SBS), 보도전문채널(YTN)과 국가기간통신사(연합뉴스)를 기준으로 한 달 간의 언론보도를 통해 오원춘 사건의 전개와 문제점을 확인<sup>1)</sup>해봤다. 그 결과, 오원춘 사건을 기사화하며 '조선족'을 제목에 붙인 매체는 ▲세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4개 매체였다. 나머지 언론매체들은 기사 본문에는 '조선족'을 표기했으나, 제목에서는 이를 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1) 모니터 결과는 해당 챕터 뒷부분에 붙임자료로 별도로 게재했다.

모니터 대상 매체 중 오원춘 사건을 초기에 보도한 매체는 ‘조선족’을 제목에 붙인 세계일보(<조선족, 길가던 20대 여성 살해하고 시체를…>)와 조선일보(<수원서 토막살인 발생… 40대 조선족 검거>)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토막살인’이라는 잔혹성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다음 날, 문화일보는 <조선족의 잔혹 살인…경찰은 13시간 헤맸다>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5일에도 <길가던 여성 토막살해한 40대 조선족>의 기사와 함께 <“성폭행… 도와주세요” 112전화… 경찰 반경 500m서 13시간 헤맨 사이 토막살해 당해 가방속 시신으로> 기사를 함께 실었다. 초반 언론보도는 사건의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오원춘 사건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면서도 ‘조선족’과 함께 ‘토막살인’이라는 잔혹성을 부각시키는 제목을 사용했다. 사건 초반 ‘수원 성폭행 토막살인 사건’, ‘수원 토막살인 사건’, ‘수원 토막사건’, ‘수원 살인 사건’ 등으로 혼재해 사용하다가 최종적으로 [수원20대여성토막살해사건]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경향신문의 ‘수원살인사건’과 비교되는 차이다.

## ② 조선족·이민자 혐오 확산을 경계하는 언론보도에도 문제점 발견

오원춘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가 ‘조선족’임을 부각시켰을 때 나타날 문제점에 주목한 언론매체도 많았다. 하지만 조선족이나 이민자 혐오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언론보도 역시 ‘온도차’는 존재했다. 경향신문은 <‘수원 살인’ 중국 교포 혐오증 확산>(8일), <[여적]‘조선족’이란 일반화>(9일), <“중국교포 전체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볼까 걱정”>(15일), <시론|다문화사회, 한국인의 이중잣대>(17일) 등의 기사를 게재해 사건 초반부터 오원춘을 조선족 혹은 이민자로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중앙일보는 오원춘 사건 초반인 7일 <온정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바꿀 때 됐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아래는 오원춘 사건에 대한 인식과 칼럼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1일 수원에서 발생한 조선족 남자의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그간 온정 일변도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기다듬을 때가 됐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들에 대해 배타적이어서 안 되겠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는 외국인인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온정주의로 흐른 측면이 있다. 인류애와 인권 차원에서 입국 자격 완화, 지문날인 철폐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 보니 불법을 저질러도 수사기관은 훈방 조치에 그치고, 법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미온적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를 경시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다.

요즘 안산시 원곡동 등 외국인 거주지역에 가보면 치안불안 때문에 해가 지면 한국인들이 마음 놓

고 다니지 못한다고 한다. 퇴근시간대 버스 정류장에는 5~6명의 외국인이 떼를 지어 한국 여성들을 희롱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 뒤 인터넷에는 한국인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동네 이름이 20곳 가까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우리가 낯익고 친근하게 다니던 지역이다.”

서울신문의 <씨줄날줄> 조선족/김종면 논설위원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그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범죄 단속과는 별개로 **다문화 포용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수원 성폭행 살해’ 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으로 밝혀지면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반일투쟁)마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반조선족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고 있다. **조선족 범죄가 늘어나고 수법 또한 날로 흉포해지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는 조선족에 관한 선입견을 줄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일보 또한 조선족이주민 혐오로 번지면 안 된다는 기사를 배치했으나, 오원춘 사건을 보도하며 ‘조선족’을 제목에 표기하고 잔혹성을 중심으로 보도했던 걸 감안하면 면피성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게재한 <사실> ‘끔찍 살인’ 이후 중국동포에게 꽃히는 차가운 시선> 칼럼 또한 또 다른 조선족 범죄를 거론하는 등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36만명 가운데 절반인 67만명의 국적이 중국이고, 중국 국적자의 70%인 46만명이 중국동포다. 이들 대부분이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구, 경기 수원·안산 등 수도권에 모여 산다. 중국동포가 밀집해 사는 경기 안산 원곡동 일대는 폭행과 흥기 난동이 끊이지 않아 밤에 외출하기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동포 출신 조직폭력배들이 성매매, 도박, 마약 같은 범죄를 일삼으며 같은 중국동포들을 괴롭히는 일도 적지 않다. 범죄로 입건된 중국인은 2007년 1만2791명에서 2011년 1만5682명으로 4년 새 22.6% 늘었다.

중국동포들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데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 정서적 상처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두게 된다. 이런 처지라서 그들 가운데는 한국 사회의 괘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흉한 일이 겹치면 언젠가는 중국동포들이 유럽의 외국인 노동자 집 단처럼 대책 없는 부위(部位)로 굶아버릴 수도 있다.”

### ③ 오원춘 사건 보도하며 또 다른 ‘조선족 범죄 부각

언론은 오원춘 사건을 보도하면서 또 다른 조선족에 의해 발생한 범죄 사건을 함께 거론하거나 부각시켜 보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래는 오원춘 사건과 별개로 같은 시기 발생한 조선족에 의한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이다.

일시	매체	제목
4월 9일	문화일보	조선족, '엽기살인' 이어 직업소개소장 살인
	연합뉴스	임금문제로 직업소개소장 살인혐의 조선족 추적
4월 10일	서울신문	"밀린 임금 받아달라" 시비 끝에 조선족이 직업소개소장 살해
4월 11일	중앙일보	영등포 살인사건 ... 피해자 피 흘리는데 응급조치 안 한 경찰
4월 12일	동아일보	영등포 직업소개소장 살해 용의자 조선족 검거
	연합뉴스	영등포 직업소개소장 살해 용의자 조선족 검거
	한국일보	직업소개소장 살해 재중동포 옛새 만에 검거
4월 13일	문화일보	'직업소개소장 살해 조선족 부산서 검거
4월 14일	서울신문	직업소개소장 살해 조선족 검거
4월 14일	조선일보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 여학생에 접근해 강제로 스킨십
4월 16일	연합뉴스	서귀포경찰, 조선족 폭행치사 용의자 추적
	조선일보	제주 조선족 산업연수생 동료에 폭행당해 숨져
4월 18일	조선일보	위조지폐로 환치기 업자 속여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
		[주간조선] 신종 재테크로 부상... 중국 고미술품 가짜 주의보! [스페셜 리포트] 신종 재테크로 부상 중국 고미술품 가짜 주의보!
4월 21일	연합뉴스	40대 조선족 男 옛 동거녀 살해 후 도주
4월 23일	세계일보	법원, 감금강간혐의 피의자 풀어줘...보복살인 불렀다 법원이 풀어준 피의자 '신고했다'...양심품고 살인
	문화일보	옛여친 성폭행 검거됐다가 영장 기각되자 잔혹 살해
	국민일보	영장기각 풀려난 성폭행범 신고자 찾아가 보복살인
	중앙일보	성폭행 조선족, 영장 기각되자 동거녀 잔혹 살해
4월 24일	세계일보	'왜 술 못마시게 하나...편의점종업원 흥기로 찌른 조선족 "술병 따"...안 따주자, 편의점 여직원을 마구
	서울신문	성폭행 가해자, 영장기각 되자 피해女 살해
	동아일보	성폭행 영장기각된 후 피해자 집 찾아가 살해 "술병 따"...거절한 알바생 흥기로 찌른 조선족
	조선일보	편의점서 술 못마시게 하자... 칼 부러질때까지 점원 찢러 성폭행 가해자, 검거 이틀 만에 풀어주자... 보복 살해 '왜 술 못마시게 하나...편의점종업원 흥기로 찌른 조선족
4월 25일	연합뉴스	중국 보이스 피싱 콜센터 금융사기 3명 구속 법원서 석방한 성폭행범 보복살인..영장기준 '논란'
	SBS	중국 보이스 피싱 콜센터 금융사기 3명 구속
	KBS	[뉴스 따라잡기] 성폭행 신고했다고 보복 살해?
4월 26일	연합뉴스	제주서 조선족 폭행치사 용의자 숨진채 발견
	조선일보	'연변 사투리 안돼' 보이스 피싱 진화 채널A, 조선족 '인육 캡슐' 유통실태 방송
4월 27일	동아일보	[채널A] 中 인육캡슐, 자양강장제 밀반입 실태 고발
	조선일보	중국산 인육 캡슐 유통 실태
4월 28일	조선일보	[영장 기각에 풀려나 '조선족 보복 살인'] '도주우려 없다' 풀어준 판사... 수사 기



		록도 제대로 안봤다 [Why] 요즘 <b>조선족</b> , 조선어 방송 끄고 한국어 방송 본다
4월 30일	연합뉴스	국내 대학 부정입학 중국인 무더기 적발<경기경찰> 서류 위조해 국내 대학 부정입학 중국인 무더기 적발
	SBS	채팅男 울린 '사이버 꽃뱀'...잘못 걸리면 패기망신
	세계일보	중국인 국내 대학 부정입학시킨 브로커 입학생들 결국
	조선일보	음란화상채팅 접속자 협박 금품챙긴 일가족 검거

조선족에 의해 발생한 범죄사건 중 살인 등 기사 가치가 충분한 사안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오원춘 사건이 아니었다면 굳이 언론이 주목해 보도할만한 사건인가 싶은 내용도 상당하다. **오원춘 사건과 연결돼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원춘 사건에서 ‘조선족’을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언론매체들(▲연합뉴스, ▲서울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한 이들 사건에서는 ‘조선족’을 부각시켰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커뮤니티에서는 “10월 10일은 중국인의 ‘인육데이’라고 한다”라는 등의 괴담이 확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언론은 이 같은 허위정보를 바로잡아야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괴담 자체를 기사화하며 공포심을 부추기는 보도들도 상당했다. 특히, 채널A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은 조선족이 인육캡슐을 유통시키는 중간상의 역할을 했다고 취재해 보도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 언론의 조선족 범죄 관련 보도행태에 관한 토론

범죄사건에서 언론이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는 데스크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다.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재발방지 등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사냥당할 마녀를 세울 것인지에 따라 다른 보도양상을 보여준다는 얘기다.**

#### ① 특정 집단을 향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언론보도의 문제

오원춘 사건에서 몇몇 언론매체들은 ‘조선족’이라는 특정한 집단을 강조했다. 이처럼 특정 집단을 부각시킬 때 문제가 드러난다. 특히, 그 집단이 한국사회 내 소수자라면 독자들로 하여금 해당 집단의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고 그것이 집단 자체에 대한 일반화된 ‘혐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다양한 삶에서 ‘범죄’가 과대표 될 때에 나타날 부작용을 늘 염두에 두고 보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범죄사건을 보도하며 잔혹성을 부각시키는 경우는 더욱 조

심해야 한다.

오원춘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에서 다른 경향이 보이기도 했다. 조선족 등 이민자에 관한 혐오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칼럼을 보면 “다수의 선량한”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착한 조선족’이라는 순결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중차별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시는 ‘지역명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수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② 중국인·조선족 범죄율 관련 팩트체크는 소용없었다

오원춘 사건에서 언론매체들은 ‘조선족 범죄’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조선족 혹은 중국인 범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를 보면, 중국은 몽골과 미국 등에 이어 8번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SBS <놈들은 다 계획이 있다... 부모님 위해 만든 보이스피싱 총정리>(2022년 7월 19일자) 기사에서 김태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 수사과 경감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은 한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전화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한국에서 넘어가신 분들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과학적 통계’로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언론을 통해서 여전히 잘못된 정보들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언론보도 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KBS <개그콘서트> ‘황해’ 코너에서 “고객님, 당황하셨어요”라는 것이 큰 인기를 끌면서 조선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키운 측면이 크다. 영화 <청년경찰> 또한 마찬가지다.

### ③ 조선족에 관한 혐오는 대체로 소수의 ‘경험’에 의해 퍼진다

조선족이나 중국인에 대한 혐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수의 ‘경험’에 의한 것들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상점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저렴한 조선족을 고용했다가 뒤통수를 맞고 억하심정을 갖는 다거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중국인 유학생과 토크를 했다가 고생했다는 식의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된 경우다. 그 경우에는 개별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소수의 경험들이 강조될 때, ‘조선족’ 등을 부각시켜 다수의 조선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 조선족에 의해 발생한 범죄 보도의 재구성

### ① 조선족에 의한 언론보도를 재구성할 때의 기준<sup>2)</sup>

○ 범죄보도 시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며 2차 가해 피해야 한다 : 언론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범죄 사건의 실체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해당 보도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유족지인 등 주변인들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거나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는 등의 내용은 되도록 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범죄보도 시 재발방지 등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범죄 보도에 있어서 '잔혹성'을 부각시키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범죄 사건을 언론이 기록하는 일은 독자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부추기기 위함이 아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재발방지 등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정부 정책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으로 보도해야 한다.

○ 특정 집단을 향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 범죄보도에 있어서 조선족을 비롯한 특정집단을 거론할 때에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인권보도준칙>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주민에 대한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적시돼 있다. 특히, 제목을 통해 부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정 지역명을 거론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해 과도한 순결함을 요구하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한다. '착한', '선량한' 등의 표현은 해당 집단에 대한 이중차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조선족'을 표기하기에 앞서서 해당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 판단이 필요하다.

○ 사이코패스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예단은 금물이다 : 대형 범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여부가 큰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언론은 선불리 과학적인 근거 없이 '사이코패스' 임을 예단해선 안 된다. 이 경우, 사건의 실체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여겨지면서 사회구조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 ② 오원춘 사건의 언론보도 재구성

○ 재구성할 언론보도 : 국민일보 <조선족 범죄 날로 흉포화...'수원 성폭행 살해' 사건은 전형적인 사이

2) 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주의할 점과 피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인 경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참고했다.

(2012.0408·국민일보)

## 조선족 범죄 날로 흉포화... '수원 성폭행 살해' 사건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 형태

수원 20대 여자 성폭행 살해사건의 범인 조선족 오원춘(42)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의 형태와 아주 흡사하다. 갈수록 조선족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가 오씨와 같은 일부 강력사건에서는 범죄 행태가 갈수록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흉포화하고 있다.

오씨는 2007년 한국에 왔다. 출생지역은 '네이멍구'로 중국에 아내와 자식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19.8㎡(6평)짜리 단칸방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오씨는 너무나 잔인했다. 그는 숨진 채 발견된 피해여성 A씨(28)의 시신을 사람이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시켰다. 경찰이 A씨의 시신을 유족들에게 얼굴만 공개했을 정도로 참혹했다. 오씨는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쳤고, A씨가 욕설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끌고 가 살해했다"고 태연히 경찰에 진술했다.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조선족 강력범죄들도 잔혹했다. 조선족 현모(30)씨는 2010년 9월 4일 새벽 1시47분 안산시 원곡동 한 편의점에 침입했다. 그는 편의점 전원스위치를 내린 뒤 아르바이트생인 김모(21·여)씨를 둔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현씨는 김씨 얼굴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김씨는 왼쪽 안구 파열로 영구 실명하게 됐고, 얼굴뼈와 두개골 골절로 한쪽 얼굴이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현씨는 도박 빚 2000만원 때문에 범행했다.

앞서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2007년 1월 24일 오후 4시30분쯤 발견된 여행용 가방 속의 여성 토막시신도 조선족에 의한 것이었다. 범인 손모(41)씨는 피해여성인 애인 정모(33)씨의 집에 갔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정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손씨는 정씨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인근 야산에 묻고, 나머지는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서울에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끝)

○ 재구성한 언론보도 : 언론연대 <경기남부 '성폭행 살해' 사건, 치안 강화필요...이주민 혐오는 경계해야>

## 경기남부 ‘성폭행 살해’ 사건, 치안 강화필요…이주민 혐오는 경계해야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해사건의 피의자 오원춘(42)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 거주하다 2007년 한국에 들어왔다. 오원춘은 경찰에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쳤고, A씨가 욕설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끌고 가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민들과 인터넷 상에서는 중국 교포에 대한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중 절반이 조선족’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특정집단에서 찾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를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국적별 외국인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몽골이 70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미국(6756명)과 캐나다(4124명) 순으로, 중국은 8번째로 범죄자가 많은 나라로 분류됐다.

	2,007	2,008	2,009	2,010	2,011
외국인 전체 평균	1,897	2,415	2,681	2,453	2,763
몽 골	4,518	6,245	6,010	5,989	7,064
미 국*	3,134	3,019	3,850	5,268	6,756
캐나다	2,254	2,416	3,096	3,301	4,124
러시아	4,250	4,254	4,366	4,238	3,785
태 국	1,481	3,527	4,140	3,986	3,634
파키스탄	2,237	3,761	3,741	2,546	2,995
우즈벡	1,896	2,383	2,792	2,138	2,986
중 국	1,998	2,775	2,748	2,459	2,921
대 만	3,343	2,047	2,512	1,559	2,357
베트남	850	1,014	2,460	2,366	2,205
필리핀	601	673	1,465	1,078	1,394
방글라데시	5,089	8,575	3,625	977	1,174
일 본	775	641	769	545	615
인도네시아	392	303	520	860	578
기 타	1,930	1,889	2,240	2,506	2,460

\* 미국의 경우 미군 및 그 군속에 의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음

이주민에 대한 혐오는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가 커지자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린 경찰의 책임도 크다.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

로 외국인 범죄 예방과 단속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조성, 체류 외국인 인권보장을 포괄하는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대책’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오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초기대응을 잘못된 데다 은폐·축소 발표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주민을 거론하는 것은 편협한 민족주의자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sup>4)</sup>

무엇보다 **경찰의 초기대응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 피해 여성은 납치 당시 오원춘이 소홀한 틈을 타 방문을 잠그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위치 파악을 벌이는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치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112신고센터 근무자의 자세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끝)

○ 재구성한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

**첫째, 범죄 사건과 무관한 오원춘 관련 정보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 정보의 축소**

: 국민일보 기사(아래 원 기사)에는 범죄 사건과 무관한 오원춘의 출생 및 가족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축소해 보다 피해자의 시선과 인권에 기초한 기사로 바꾸었다. 이 부분의 경우 명백한 <인권보도준칙> 위반이다.

**둘째, 범죄사건에서 ‘조선족’ 등 특정 집단을 부각하는 내용의 삭제 및 한국사회 내 외국인 범죄율 통계 추가해 팩트체크에 기초한 보도로 수정**

: 원 기사에는 ‘조선족’을 제목에 표기하고 조선족 범죄가 ‘홍포화’되고 있다는 근거를 위해 또 다른 조선족에 의한 범죄를 나열하는 등 범죄 예방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삭제했다. 또한 원 기사에서는 “조선족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지만 팩트체크에 기초해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율에서 조선족 혹은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게 사실이다. 팩트체크에 기초해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과학적 통계를 포함해 독자들로 하여금 오원춘 사건이 조선족이나 이주민의 범죄로 일반화할 우려를 차단했다.

**셋째, 경찰은 오원춘 사건에서 늦장 대응과 거짓말은 물론 ‘조선족’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킨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프레임 설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 추가**

: 오원춘 사건 보도에 있어서 당시 여러 매체를 통해 ‘조선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 데에는 경찰의 역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찰은 본인들의 ‘부실대응’에 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3) 미디어오늘, <“조선족 범죄자 취급은 日우익 제일동포 차별과 같다”> 기사 참조

4) 경향신문, <‘수원 살인’ 중국 교포 혐오증 확산> 기사 참조

‘외국인 범죄에 관한 치안대책’을 포함하는 등 책임을 돌리는 행보를 보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몇몇 언론이 ‘조선족’을 부각시킨 것도 문제지만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문제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프레임 전환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사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추가했다.

### 조선족 범죄 관련 보도를 접했을 때의 체크리스트

• 해당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반드시 ‘조선족’을 표기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
• ‘조선족’을 제목에 표기하는 등 특정 민족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는가.	✓
• 범죄 예방보다는 ‘잔혹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
• 조선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나	✓
• 개인적인 잘못을 특정 집단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나	✓
• 타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소수자의 경험을 범죄와 연결해 해당 집단에 대한 혐오·공포감을 조장하지 않았나	✓

## 사례2. 중국인 특혜: 건보료 중국인 손가락론을 중심으로

최근 커지는 반중정서의 중심에는 ‘중국인 특혜’ 담론이 존재한다. 중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다량으로 매입하거나 한국 기업에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는다는 얘기가. 여기에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더해졌다.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투표 자격도 ‘중국인 특혜’로 임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국적법 개정은 중국인 특혜법이 다’라거나 ‘우리가 낸 건보료가 중국인한테 잘못 흘러들어간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의 문제다.

이에 중국인 특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있었던 ‘건보료 중국인 손가락론’을 중심으로 언론보도를 살펴봤다.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존재하거나 반중정서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내용들을 주로 점검했다. 또한 언론보도 중 하나의 기사를 선정해 팩트체크에 기반을 둔 인권 관점으로 기사를 재구성, 독자들이 ‘중국인 특혜’ 관련 언론보도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제시했다.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중국인 특혜 논란

한국은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sup>5)</sup>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sup>6)</sup>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특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부정수급’과 함께 ‘외국인 먹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보재정 위기는 커졌고 그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외국인’ 중에서도 유독 중국인이 특정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인에 대한 ‘특혜’와 관련해 최근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건보료다. 지난 5월에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본인의 SNS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손가락만 얻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중국인 건보료 손가락론’ 논란에 불을 붙였다. 윤 후보는 해당 글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적시돼 있다.

6)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조.



건보료 '중국인 특혜' 언론보도 양상<sup>7)</sup>

① '중국인 손가락론'에 편승한 언론

일시	매체	제목
1월 30일	연합뉴스	尹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명의도용 방지"
	동아일보	윤석열 "국민 법상에 손가락 없는 외국인 건강보험 해결할 것"
	한겨레	윤석열 "국민 법상에 손가락 없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할 것"
	세계일보	윤석열 "외국인, 국민 법상에 손가락만... 건보 문제 해결할 것"
	국민일보	윤석열 "외국인들 건강보험 명의 도용 막겠다"
	조선비즈	윤석열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상위 10명 중 8명 중국인... 문제 해결"
	MBC	윤석열 "국민 법상정 맞게·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채널A	이재명 "운동하면 지역화폐로"... 윤석열 "외국인 건보 정비"
1월 31일	오마이뉴스	'손가락 망언'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건보 흑자 알고 있나
2월 1일	조선비즈	윤석열 "중국인이 건강보험 30억 혜택"에 이재명 "외국인 혐오"
2월 2일	한국일보	윤석열 '외국인 건강보험 손가락' 언급에 이재명 "혐오 조장 정치 안 돼"
	한겨레	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 윤석열 '손가락론' 틀렸다
	오마이뉴스	외국인 혐오·반중 올라타는 윤석열... 이재명 "나치를 보라"
	조선비즈	尹 '중국인 건보 30억 혜택' 발언에 이재명 "나치"... 野 "희대의 선동가"
	한겨레	'외국인 건보' 놓고 나흘째 공방... '혐오 조장' vs '희대 선동가'
	MBC	尹 "법상에 손가락 없는 외국인" vs 李 "극우 포퓰리즘"
2월 3일	MBC	윤 "손가락 없는 외국인"... 이 "극우 포퓰리즘" [시선집중] 윤건영 "윤석열=짜퉁 트럼프.. 김만배와의 관계, 진실하게 고백해야"
	JTBC	윤석열 반중정서 자극? 사드 추가배치·외국인 건보료 손가락론
	오마이뉴스	"이주노동자, 보험료 내도 병원 거의 못 가... 윤석열 사과해야"
2월 7일	KBS	[특파원 리포트] 글로벌 혐오시대
2월 11일	연합뉴스	野 서정숙 "중국인 가입자만 낸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 많아"
2월 13일	TV조선	[뉴스야?!] 손가락은 중국인만?
3월 17일	연합뉴스	[이슈 In] '손가락만 얻는' 외국인 건보 개선 공약했는데... 얼마나 실현될까

윤석열 후보의 SNS 게시글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인용되며 퍼졌다. 다수의 매체는 '외국인 건강보험'을 제목으로 올렸으나 조선일보 계열의 조선비즈와 TV조선이 '중국인'을 특정해 보도한 점이 눈에 띈다. TV조선은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뉴스야?!> 손가락은 중국인만? 기사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가 맞다"며 "(하지만) 윤 후보 주장도 맞긴 하다"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7) 윤석열 당시 후보의 '중국인 건보료 손가락론' 게시글 관련 10대 중앙일간지와 지상파 3사, 보도전문 채널과 국가기간통신사의 기사와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 기사를 네이버에서 '건보료', '외국인', '중국' 등을 통해 검색한 총 97건의 기사를 분석했다.

앵커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가 맞습니다.** 2017년엔 2478억원이 남았고, 2020년에는 5715억원이 남아 흑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보 혜택만 보고 귀국해버리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기 위해 2019년에 규정을 강화한 게 효과를 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이재명 후보 주장이 맞고,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손가락은 틀린 건가요.**

기자 : **윤 후보 주장도 맞긴 합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절반 가까운 44%가 중국인인데, **중국인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24%로, 내는 보험료보다 혜택을 보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국 가운데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경우는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 **결국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모두 서로 유리한 통계를 활용한 셈이군요.**

## ② '중국인 손가락론'을 팩트체크한 언론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SNS 게시물 바로 다음날인 31일 <'손가락 망언'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건보 흑자 알고 있나> 기사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손가락만 얹었다'고 표현하기엔 어폐가 있어 보인다"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의한 흑자가 아니었다면 건보재정 적자 폭은 더 커졌을 거란 지적이다.

한겨레도 같은 날 <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윤석열 '손가락론' 틀렸다> 팩트체크 기사를 송고했다. 기사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여부와 ▲외국인 건보가 중국인에 편중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를 전제로 사건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인 가입자들은 지난 4년 동안 4조5996억원의 건보료를 내고 이 가운데 69.4%인 3조1901억원만 급여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수치만 봐도 '외국인이 손가락만 얹고 있다'는 윤 후보의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중략)...**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명단에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때마다 등장하는데요...(중략)...**건강보험은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혈우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이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3억3200만원이나 자기 부담금을 냈는데도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한겨레에 따르면, <2020년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3만6075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동포 등 한국계 중국인(64만7576명)과 중국인(24만7330명) 등 중국인이 89만4906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은 50살 이상이 35만583명으로 ‘전체 50살 이상 외국인(54만627명)’의 64.8%로 집계됐다고 한다.** 한겨레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많고 이들의 연령대 역시 높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에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③ 팩트체크가 중국인을 타깃으로 하는 보도를 양산하기도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이 사실은 흑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중국인을 타깃으로 하는 자극적인 보도는 이어졌다. 무엇보다 팩트체크가 오히려 반증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를 공개하고 “**지난 4년 간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적자는 3843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수십억 손가락 얹은’ 중국인 사라질까>와 <외국인 건보료 불안한 ‘흑자’…중국인 4년간 1.8조 내고 2.4조 혜택> 기사에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다음과 같은 문단을 실었다.

“특히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적자는 3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중국인 가입자들이 1조8630억원을 건보료로 내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2조2473억원을 토해낸 결과다. **한국과 가까워 왕래가 편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쉽게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포털에 노출되는 언론매체들이 10대 중앙일간지와 지상파 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됐는데, 관련 언론 기사들 중에서는 ‘중국인’을 타깃으로 자극적인 기사들이 다수였다.

일시	매체	제목
1월 31일	더퍼블릭	중국인, 33억원 건보급여 받고 약 10%만 본인부담…윤석열 “손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할 것”
2월 4일	뉴데일리	재정누수 원인이었던 ‘외국인 건강보험’… 대선판 핫이슈로 떠오른 이유
2월 23일	스카이데일리	‘외국인 300만 시대 건보료, 중국인 ‘먹튀엔 여전히 무방비
3월 16일	뉴데일리	가입은 혼자 하고, 혜택은 아들손자며느리까지 무더기… 尹 ‘외국인 암체 건보’ 손댄다

4월 6일	머니투데이	'수십억 손가락 얹은' 중국인 사라질까
4월 26일	서울경제	내가 낸 건보료로 중국인 1명이 '30억 혜택' 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9일	머니투데이	외국인 건보료 불안한 '흑자'... 중국인 4년간 1.8조 내고 2.4조 혜택

## ‘중국인 특혜’ 관련 보도행태에 관한 토론

‘외국인 건강보험’이나 ‘국적법 개정’,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등은 그 나름의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그 대상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특혜’라는 오명을 쓰면 정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이 그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적법> 개정이다.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담고 있으나, ‘중국인 특혜’로 규정되고 언론에서도 다량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30만 명 이상의 국민청원을 통해 사실상 무산됐다. 언론이 만든 반중정서가 인도적인 정부 정책 추진을 중단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 ① 정치인 등 유명인 발언 그대로 받아쓰기 행태

윤석열 후보의 ‘외국인 건보료’ 발언은 사실과도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일단 받아쓰기에 열중했다. 한겨레는 추후 팩트체크를 통해 꼼꼼히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했지만, 첫 보도는 타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의 발언을 전달하는 기사였다. 문제는 언론들의 이 같은 행보가 허위 정보를 확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특정 정책에 그리고 집단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와 같은 정책 사안들은 국정감사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단골메뉴와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언론보도 같은 시기 반복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언론사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인다.

### ② 정책에는 이유가 있지만 언론은 주목하지 않는다

정책에는 이유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외국인이 편입된 때를 주목해야 한다. 2005년 7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개정된 것을 확인<sup>8)</sup>할 수 있다.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8)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

외국인을 대상 건강보험에서 ‘본인의 신청’ 규정이 빠지고 ‘의무가입’으로 변경된 것이다. 뉴스톱 <건강보험 외국인 의무가입은 퍼주기? 오히려 외국인이 반대한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3D업종’이라 불리는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된 것이 개정의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외국인 의료보장을 규정한 국제적 기준들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25조<sup>9)</sup>,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대한민국 발효일 1979. 1. 4.)」 제5조(e)(iv)<sup>10)</sup>,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 발효일 1990. 7. 10.)<sup>11)</sup>」 제9조와 제12조 제1항 등에서 사회보험을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sup>12)</sup>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국민만이 아닌 ‘만인’, ‘모든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건강보험법」을 통해 외국인의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 ③ 특정 집단을 향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언론보도의 문제

정부 정책들이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을 위한 특혜’로 기사화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 부분은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통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는 앞선 기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과 연령, 노동현장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권에 중국인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10)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e) 중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iv)를 담고 있다.

1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는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적시돼 있으며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12) 2021년. 12월 8일.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30p 참고.

이렇듯,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권에 중국인이 포진돼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그런 배경에 주목하기보다는 단편적인 통계만을 전달하는 것에 멈춰져 있다. 이는 ‘사실’에 기인한 보도이지만 통계에 관한 ‘오독’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언론들이 특정 사례를 제시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중국인’들이 지원 받은 특정 사례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 특정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그만큼 클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다만, 부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안 자체를 호도하거나 ‘악용’사례만을 언론에서 강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악용사례는 소수이지만 해당 제도로 인한 정당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이들이 다수임을 잊어선 안 된다.

### 중국인 특혜 관련 보도의 재구성

#### ① 중국인 특혜 관련 보도를 재구성할 때의 기준<sup>13)</sup>

○ 정치인들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성 발언인지를 판단하여 받아쓰기는 지양해야 한다 : 그동안 정치세력의 ‘혐오’에 기댄 정치공세에 관한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정치인의 역할은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함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언론·미디어가 혐오를 나르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혐오표현이 유통되지 않도록 언론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덧씌울 수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 역시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되며 마련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에는 “우리는 주요 정치인, 고위 공무원, 종교 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하는 혐오표현은 더욱 엄격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인·종교인 등 유명인의 혐오표현은 청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 더 위험할 뿐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부러 혐오표현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언론은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뤄야 한다.

13)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 규약 상 사회보험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지위 그리고 2011년 제정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호준칙>과 2020년 제정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을 참고해 주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사회적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보도할 때에는 왜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의의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론은 ‘출신 국가’ 등 국적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정책이 나온 배경과 의미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나라들이 혜택을 보는지 줄 세우는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언론보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퍼 나르게 된다.

○ 타 국가와 관한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국가가 지닌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작성됐는지 살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불리한 보도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 언론이 타 국가나 민족에 관한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국가·민족에 관한 역사·문화 등을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타 문화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자국의 눈으로만 본 기사는 그 안에 차별·혐오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특정 국가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보도의 영향력을 고려해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차별과 혐오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

## ② 건보료 중국인 손가락론 관련 언론보도의 재구성

○ 재구성할 언론보도 : 서울경제 <내가 낸 건보료로 중국인 1명이 ‘30억 혜택’ 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0426·서울경제)

### 내가 낸 건보료로 중국인 1명이 ‘30억 혜택’ 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다시 말해 혈우병 환자인 6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쓴 진료비는 총 32억 9501만 9000원이다. 혈우병은 한 번 피가 나면 지혈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매우 더디게 되는 질환이다. 혈우병 환자는 고가의 응고인자 제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피가 나는 치료 등을 받거나 하면 약 값만 10억 원이 넘기도 한다.

진료비는 33억 원 가량 나왔지만 A씨가 부담한 돈은 3억 3200만 6000원. 진료비의 10% 수준이다. 이유는 A씨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글리코젠축적병으로 7억 1655만 원의 진료비가 나온 중국인 B씨는 8133만 8000원,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7억 2246만 9000원의 진료비가 나온 중국인 C씨는 3638만 6000원을 각각 본인 부담금으로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인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없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2개를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실제 이뤄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26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0년 1조 2951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8918억 원의 급여비 혜택을 봤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68.9%. 100원을 내고 69원을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다. 더 내고 덜 받은 것으로 재정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른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중국인으로 급여비 지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근 4개년(2017~2020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 중국인은 124%인 반면, 인도네시아인은 8.5%에 그쳤다. 네팔·필리핀·미얀마인 등도 10~20%대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인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더 내고 덜 받는데 중국인만 유독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108억 원이었던 중국인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으로 늘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인에게 급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9년 한 중국인의 경우 조모·부·모·처조부·장모·배우자·자녀 등 9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2021년 7월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10위 안에 중국인은 총 7명이었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4명이나 됐다.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국내 6개월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입자의 가족이 치료만을 위해 입국해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는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각각 지난 해 1월과 12월 대표 발의했다.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 또는 거주 사유 등을 추가해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외국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받는 급여비보다 큰 상황에서 특정 국적인을 겨냥한 제도를 만들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 체류한 지 6개월이 지나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면서 정



작 급여비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입자도 적지 않은데 그에 대한 얘기는 왜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받는 혜택을 받는 급여비보다 매년 큰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국적인을 타깃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끝)

○ 재구성할 언론보도 : 언론연대,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였다…정치인들의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성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4>

(2022.0920·언론연대)

##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였다…정치인들의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성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다시 말해 혈우병 환자인 60대 외국인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쓴 진료비는 총 32억 9501만 9000원이다. 혈우병은 한 번 피가 나면 지혈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매우 더디게 되는 질환이다. 혈우병 환자는 고가의 응고인자 제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피가 나는 치료 등을 받거나 하면 약 값만 10억 원이 넘기도 한다.

진료비는 33억 원 가량 나왔지만 A씨가 부담한 돈은 3억 3200만 6000원. 진료비의 10% 수준이다. 이유는 A씨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글리코젠축적병으로 7억 1655만 원의 진료비가 나온 외국인 B씨는 8133만 8000원,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7억 2246만 9000원의 진료비가 나온 외국인 C씨는 3638만 6000원을 각각 본인 부담금으로 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의 의료비에서 자기 부담률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사회건강보험제도 덕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자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외국인 의료보장을 규정한 국제적 기준과도 맞물린 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때인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

14) 오마이뉴스 <‘숟가락 망언’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건보 흑자 알고 있나> 기사와 한겨레 <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윤석열 ‘숟가락론’ 틀렸다> 기사 참조.

다. 실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1조4915원으로 이들의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는 9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외국인 국민보험에서는 5715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치를 합하면 1조4095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건강보험으로 인해 전체 건보재정의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건강보험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회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보완해야할 부분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발생으로 건보재정이 위축됐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같은 위험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건보 재정 확충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외국인 건강보험만을 겨냥하는 제도는 다른 면에서는 '차별'이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현재도 혜택보다 불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용자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돼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농어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경감(22%)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기도 하다. 이 밖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 인정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은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인정되는 것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사회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건보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낸 '사무장병원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불법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201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1년 동안 모두 2조9945억3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끝)

○ 재구성한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

**첫째, 내국인이 낸 건강보험으로 특정 국가인 중국인이 혜택을 받은 것처럼 묘사된 부분 수정**

: 서울경제의 기사 제목만 보면 내국인이 낸 건강보험을 중국인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묘사돼 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온 시점에는 이미 '외국인 건강보험' 이 흑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도 이 사실 관계가 적시돼 있는데, 오해하기 쉽도록 제목을 다는 것은 문제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건강보험제도를 두고 중국인이라는 특정 국가를 강조한 부분도 문제일 뿐 아니라, '1명이 30억'이라고 자칫 악의적으로 느낄 만한 부분이 있어 수정했다. 특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적시해 독자로 하여금 특정 국가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도록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둘째, 중국인이 건강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적게 낸 부분은 한국의 사회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반대의 의미로 수정.**

: 서울경제는 리드문부터 '중국인'으로 급여비 지출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건강보험제도의 의미보다는 특정 국가를 깎아 내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외국인들이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낮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사회건강보험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점으로 바꿔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으로 특정된 것을 '외국인'으로 교체했다.

**셋째,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건강보험 외국인(중국인) 손가락론'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고, 특정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삭제**

: 서울경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팩트체크하지 않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았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부분 또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담은 내용으로,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덜어냈다.

**넷째,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건강보험 제도의 외국인 차별과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할 부분을 추가.**

: 오마이뉴스나 한겨레는 이주민 등 인권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에 주목해 건강보험제도 개정 및 보완사항을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농업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용자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경감 및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을 기사에 추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세대 인정 범위 문제도 포함했고,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 중국인 특혜 관련 보도를 접했을 때의 체크리스트

•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중국인'을 특정할 이유가 분명한가	✓
• 정치인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형태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하지 않았나	✓
• 소수자 인권 관련 인도적 차원의 정책 보도라면, 그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나	✓
• 사실에 부합하는 언론보도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나	✓
• 타 문화권 관련 내용이 문화다양성 관점이 충분히 담겨 있나	✓

### 사례3. 문화공정: 한복 논란을 중심으로

“중국이 한복은 한족 전통 의상인 한푸(漢服)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설명] 최근 몇 년 간 한중의 애국주의 네티즌들은 문화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치, 삼계탕 같은 음식에서부터 갓, 아리랑,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 공방전이 일어났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를 문화공정, 즉 중국의 문화 예속화 시도(또는 문화침탈)로 여기며, 이는 반중정서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문화공정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한복 문화공정’ 논란을 통해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았다.

♣ 문화공정 #사이닝니키, #조선족, #한푸, #한복

#### 1) 한푸(漢服)의 유행

중국에서 한푸(漢服)가 유행한 배경에는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주의가 있다. 1990년대 공산권이 몰락하자 중국은 공산당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으로 민족주의를 강화했다. 사회주의가 힘을 잃은 자리를 부국강병의 논리가 대신했다. 이와 함께 중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방향전환이 일어난다. 중국 전통의 후진성을 비판하던 사조가 민족주의와 전통의 부활로 기울어지게 된다. 중국 정부는 애국심 고취와 전통문화 부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sup>15)</sup>

시진핑 주석이 애국주의를 중요한 통치 요소로 삼으면서 중화민족주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시 주석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꿈(中國夢)이라고 선언했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중화 문화의 발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 가운데 한푸(漢服)가 한족(漢族) 전통문화의 상징으로 부각되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한푸(漢服)는 치파오를 대신하는 전통의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탄생한 신조어다.

한푸(漢服) 입기는 애국주의 운동의 하나가 됐다. 한푸(漢服)의 부활은 청년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애국주의 교육과 국학교육의 영향을 받아 중국 역사전통에 대한 자존감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크다. 소비자 민족주의도 중요한 요소가 됐다. 소비자 민족주의는 국산품을 사거나 외제품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된다.<sup>16)</sup>

전통문화에 대한 젊은 층의 고조된 관심은 한푸(漢服)산업의 활황을 이끌었다. 2019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의 검색어 ‘#한푸’는 클릭 수가 21억6000만 건을 기록했다. 틱톡에

15) 리홍메이, <중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이해>, 『아이돌이 된 국가』, 갈무리, 2022년

16) 위의 글, p63

올라온 한푸 영상은 350만 건, 중국이 차단한 인스타그램에도 ‘#한푸’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4만5000건에 이르렀다.”<sup>17)</sup> 중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아이미디어리서처에 따르면, 2015년 1억9,000만 위안(약 370억 원)이었던 중국의 한푸 시장 전체 매출은 2021년 100억 위안(약 1조9,7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엔 2015년보다 65배 이상 증가한 125억 위안(약 2조4,600억 원)으로 매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sup>18)</sup>

## 2) 사이닝니키 사태

한푸(漢服)의 유행이 처음부터 양국 간 갈등을 불러온 건 아니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비교적 최근인 2019년까지 한푸(漢服) 논란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4년간 한푸(漢服)를 보도한 언론사는 중국 인민망(인민일보 인터넷판)뿐이다.

한푸(漢服)가 한 중의 갈등소재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2020년 11월 발생한 ‘사이닝니키 사태’였다.

11월 2일 중국 게임 사이닝니키 제작사는 한복 아이템을 출시한다고 공지했다. 한국 런칭을 기념해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이벤트인데, 하루 앞서 트위터에서 일어난 ‘갓 논란’으로 과열돼 있던 중국 유저들이 웨이보와 트위터에서 “한복이 명나라 의상과 비슷하다”, “한복은 한국 고유 의상이 아니다”, “한푸를 왜 한복으로 내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게임사는 “다수의 유저들이 피드백한, 사이닝니키 한글판에서 조국에 대한 욕설이나 악의적인 사실 왜곡을 게시한 유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채팅 금지 조치에 국한하지 않고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사는 “우리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국가의 존엄을 끝까지 수호할 것이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감시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 유저들이 공식 카페에 가서 한국어로도 사과문을 올리라고 항의하며,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결국 게임사는 한복 아이템을 전량 회수하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사이닝니키 사태에 이어 11월 말에 ‘김치 종주국 논란’까지 터지며 ‘문화공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 3)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논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반중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등장하는 장면은

17) 중앙일보, 2019.11.4., <치파오 벗고 한푸 입는 중국…한족주의 부활하나>

18) 한국일보, 2022.09.04., <"21세 중국 여성은 '한푸'를 입고 거리를 누빈다">

‘중국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문화공정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다. 여기에 쇼트트랙 종목에서 한중 선수 간 편파판정 논란이 일어나며 반중여론이 거세졌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반중여론이 들끓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나섰다.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문화공정’ 반대”,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 역사”, “한푸(漢服)가 아니라 한복(韓服)”이라 외치면서 논란은 정치외교적인 차원으로 격상됐다. ‘문화침탈’에 초점을 맞춘 언론보도들이 이어지고, 문화공정 프레임이 2030세대를 넘어 사회적으로 고착화됐다. 한복 논란은 김치, 아리랑, 판소리 등 다양한 이슈와 결합하여 문화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했고, 반중정서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일보] 한중 수교 30주년 對中 인식 조사<sup>19)</sup>

#### 4) 한복 논란 등 문화공정 관련 언론보도

##### 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문화공정 프레임으로 제목달기

사이닝니키 사태를 두고 일부 언론은 마치 중국 게임사가 “한복은 중국 것”이라고 직접 주장한 것처럼 기사의 제목을 달았다. 사소해보이지만 이는 사건의 선후관계를 뒤바꿔 사실을 왜곡하는 효과를 낳았다. 중국 게임사가 한복을 중국 전통 옷이라 여겼다면 한복 아이템을 출시했을 리 없었다. 논란을 주도한 건

19) 동아일보, 2022.08.22., <MZ세대 79% “中 싫다”… 北-日보다 호감도 낮아>, 동아일보, 한국국제교류재단(KF), 성균중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11~14일 전국 만 20~39세 성인 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중국(과 한국)의 애국주의 네티즌들이지 게임사가 아니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다루지 않았다.



또 한편 언론들은 게임사가 “한복은 중국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따라서 서비스를 종료한 것처럼 보도했다. <사이닝니키, '한복은 중국 것' 논란에 "조국과 입장 같아 韓 서비스 종료">(한국경제)라고 제목을 다는 식이다. 나무위키에도 이렇게 주관적 해석(“앞으로도 중국의 전통과 국가의 존엄을 지킬 것=한복이 중국옷이라는 국론을 옹호할 것”)이 더해진 번역문이 지금도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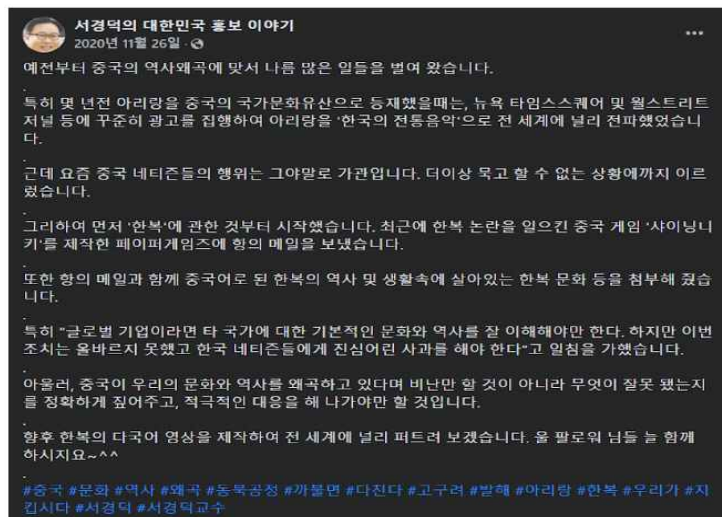


그러나 중국 정부나 관영 언론은 “한복은 중국 것”이라거나 ‘한복은 한푸(漢服)’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게임사도 한복 원조 공방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게임사가 한복을 한국의 전통의상이라고 소개한 게 사태의 발단이 됐다. 당시 <서울경제>는 “중국 일부 네티즌의 말을 곧바로 중국의 입장으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대다수 언론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복 논란을 중국 정부 차원의 문화공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 ② 애국주의 캠페인에 경도된 보도

한푸 논란을 문화공정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은 일부 애국주의 인사들의 캠페인과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보도에 의해 강화된다. 대표적 인사 가운데 하나인 서경덕 교수는 2020년 11월 26일 “최근에 한복 논란을 일으킨 중국 게임 ‘사이닝니키’를 제작한 페이퍼게임즈에 항의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그는 중국이 문화공정을 통해 한복마저 빼앗아가려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2021년 9월에도 바이두에 “한복은 ‘조선족 복식’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의상’으로 올바르게 수정하라”며 항의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서 교수가 속칭 ‘사이다’ 발언을 할 때마다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중국 게임사에 항의메일을 보냈다고 알려진 당일에만 34건이 보도됐다. 바이두에 항의한 날에도 20건 넘는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게임사는 그가 주장하는 ‘문화공정’의 주체가 아니므로 항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게임사가 중국 네티즌의 행위까지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고, ‘문화공정’에 적극 동조했다고 볼만 한 근거도 없다. 바이두에 대한 항의도 마찬가지이다. 바이두 백과는 네티즌의 편집 참여가 가능한 위키백과 형식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니다. 공산당에 대한 입장은 검열을 받고, 그 밖의 내용들은 애국주의 네티즌들에게 강한 영향을 받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임사와 바이두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걸 두고 ‘중국의 문화역사 왜곡에 맞선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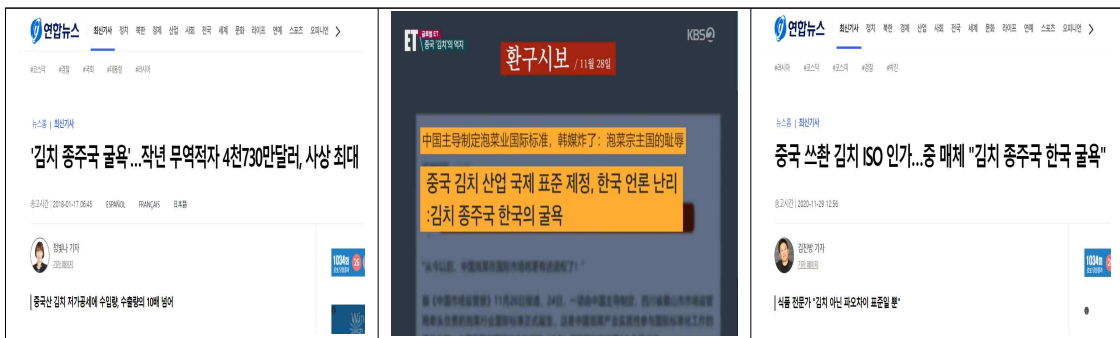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들은 그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확정기를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의 갈등은 현실 세계로 퍼져나가고, 애국주의 대결 구도는 더욱 강화된다.

### ③ 부실보도가 키운 김치 종주국 논란

중국 애국주의 네티즌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한국 언론이 보도하면 한국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중국 언론이 한국의 반중정서를 보도하면 중국여론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중국의 극단적인 애국주의 언론과 한국의 혐중 상업주의 언론의 공모”<sup>20)</sup>가 혐오의 상호상승 효과를 만든다.

‘김치 종주국 논란’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논란은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바이두 계정에서 시작됐다. 환구시보는 풍문사구(風聞社口)라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바이두 계정에 공유했다. 중국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국제표준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환구시보는 네티즌이 쓴 원문 가운데 “김치 종주국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는 내용을 인용해 멘트를 달았다. 그러자 한국 언론들이 ‘중국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 中 관영매체(환구시보)가 ‘김치 종주국 한국의 굴욕’이라 보도했다’는 식으로 일제히 퍼 나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김치 종주국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애초에 ISO에 등록된 것은 김치가 아니었다. 중국식 절임채소인 ‘파오차이(泡菜)’로, 김치와 전혀 다른 음식이다. 환구시보가 올린 글은 정식보도가 아니었다. 그러니 中관영매체가 “한국의 굴욕”이라 보도한 게 아니다.<sup>21)</sup> ‘김치 종주국 굴욕’이란 표현도 2018년 연합뉴스가 한국의 김치 수입이 수출의 10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달았던 제목을 중국 네티즌이 게시글에 인용한 것이다.<sup>22)</sup>



정리하면, 중국의 한 애국주의 네티즌이 파오차이의 국제표준취득을 전하며 연합뉴스의 ‘김치 종주국 굴욕’이란 표현을 인용했다. 이를 환구시보가 바이두 계정에 퍼 나르며 재인용했다. 이걸 다시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중국의 관영매체가 ‘김치 종주국 굴욕’이란 주장을 했다는 내용으로 바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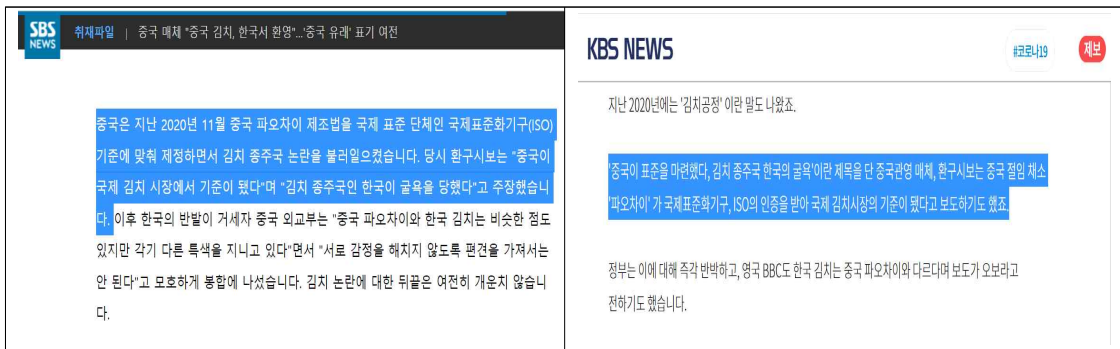
20) 노컷뉴스, 2022.02.20., [한판승부] "중국의 한복 집착, 뜻밖의 이유 있다"

21) 이런 표현을 공식계정에 멘트로 사용한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

22) 당사자인 연합뉴스는 이런 사정도 모른 채 환구시보가 "김치 종주국 한국 굴욕"이라 주장했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것이다.

번역의 오류도 오해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중국에서는 ‘파오차이는 한국 것’(=한국이 파오차이를 빼앗으려 한다), 한국에서는 ‘김치는 중국 것’(=중국이 김치를 빼앗으려 한다)이라는 주장으로 비춰진 것이다.<sup>23)</sup> 바이두 계정의 매체적 특성을 무시(또는 무시)했던 것도 오류를 키운 원인이다. 팩트체크를 통해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는데도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여전히 환구시보가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보도하며 김치 공정이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양국 언론이 일부 네티즌의 주장을 서로 주고받으며 문화갈등을 증폭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올해 7월에는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진수기(珍馐记)’<sup>24)</sup>와 중국 웹드라마 ‘야불기적천세대인’이 대장금 표절 의혹과 문화 공정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해당 드라마들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여주인공이 황궁에 들어가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태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줄거리가 한국 드라마 대장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드라마에 삼겹살과 상추쌈이 나온 것을 두고 국내에선 공분이 일어났다. 한국 언론들은 “이건 도둑질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 “중국 전통복식을 쓰면 되지 왜 굳이 한복을 사용하냐”<sup>25)</sup> 등의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을 기사화했다.



23) 이런 오해는 한푸(漢服), 한복(韓服) 논쟁에서도 일어난다.

24) 4월 7일 디즈니플러스 중국서비스에서 공개된 드라마로, 한국에서는 시청할 수 없다.

25) 조선일보, 2022.07.05., <한국만 빼고 방영된 中드라마, 한복·삼겹살에 '대장금' 표절 의혹도>, 정채빈 기자

그러자 환구시보가 인터넷판 환구망에 <한국 누리꾼들, 중국 웹드라마 배우가 입은 옷이 한복이라고 주장... 중국 누리꾼들 '이건 명나라 복식인데>라는 기사를 내놓았다. 이 기사는 “(양국이)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열린 가슴으로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한국과 중국 사이 문화 분쟁은 일부 젊은 한국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 (루 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소장)는 인터뷰 내용이 분노를 일으켰다. 환구시보는 “모두 다 중국 미식(中國美食)”이라는 중국 네티즌의 주장도 함께 실었다.

다음은 서경덕 교수의 차례였다. 서 교수가 “표절보다 더 큰 문제는 관영매체의 적반하장식 주장이다.”,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 훔치기는 만연해 왔고, 인기 예능 및 드라마 등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 유통해 왔으며, 한류스타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도둑국' 이미지는 이미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일침’을 놓자 국내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 교수의 SNS를 퍼 날랐다.

한국 인터넷에서 제기된 중국 드라마 표절 논란이 한국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자 중국의 애국주의 네티즌과 중국의 관영매체가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다시 한국의 매체들이 받아쓰고, 애국주의 인사가 충돌하며 양국민의 정서가 악화되는 불통의 패턴이 규칙처럼 반복되고 있다.

## 5) 언론의 한복(漢服) 논란 관련 보도행태에 관한 토론

### ① 사실근거가 부실한 ‘문화공정’ 규정

한국 언론은 한복을 포함해 대중·전통문화 영역에서 벌어지는 한중 네티즌 갈등을 ‘문화공정’이라는 렌즈로 바라본다. 그러나 대다수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문화를 빼앗고, 네티즌들의 애국주의적 행태를 조종한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중국 애국주의의 자발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무시한다.

한국 언론은 사이닝니키 사태를 ‘문화공정’의 프레임으로 보도했지만, 이 사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한복을 빼앗아가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중국 네티즌의 인터넷 애국주의를 문화공정이라는 하나의 렌즈로만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복잡한 양상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조선족 한복이 등장한 건 중화민족의 단결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컸다. 중화민족주의로 소수민족을 결속시키려는 성격이 짙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복을 빼앗아가려 한다’는 논란만 커졌고, 중국의 패권전략과 소수민족 억압이라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 ② 극단적 애국주의에 과도한 대표성 부여

인터넷에서 중국 민족주의 운동을 펼치는 중국 누리꾼들은 주로 청년세대들로 구성된다. 중국 애국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 등장하여 활발하게 활동한 중국의 인터넷 극우 청년집단을 분노청년(憤靑, 편칭)이라 불렀다. 이들은 애국을 절대시하고 중화주의를 강조하며 외국을 적대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2010년대 들어 소분홍(小粉紅·샤오펜홍)이 등장했다. 소분홍은 애국주의를 공유하지만 이전 세대와는 다른 미디어 화법으로 민족주의를 표출한다고 평가된다. 일부에선 이런 소분홍의 특징을 ‘팬덤 민족주의’로 설명하기도 한다. 마치 팬들이 자신의 아이돌을 사랑하듯이 국가를 사랑한다는 의미다. 소분홍의 행동패턴은 정치운동보다는 아이돌 산업의 팬덤 문화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양성되었다고 본다. 글로벌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국민 정서를 자극받은 젊은 세대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팬덤과 디지털 문법으로 국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2016년 걸그룹 <트와이스>의 쓰위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디바 출정<sup>26)</sup>은 사이버 민족주의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언론은 소분홍 같은 애국주의 인터넷 집단에게 과도한 대표성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의 극단적인 견해가 중국(인)의 주류적인 여론으로 인식되면서 그들의 주장은 한국에서 실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인터넷 세계에 갇혀있던 극단적 주장이나 잘못된 정보가 언론보도를 통해 빠르게 확산한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애국주의 캠페인을 과잉 보도하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편향은 소분홍 등을 중국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인터넷 흥위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실제 공산당은 청년세대의 인터넷 애국주의를 통치에 활용한다. 관방 언론은 필요에 따라 중국 네티즌의 입장을 지지하고, 네티즌은 관방 언론의 권위에 기대며 서로를 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을 공산당에 완전히 세뇌당한 꼭두각시 같은 존재로 보는 건 맞지 않다. 이러한 시각은 소분홍 현상의 극히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sup>27)</sup>이며, 중국의 여론을 읽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중국의 (네티즌)여론을 전하는 언론은 이러한 중국 인터넷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터넷 공간을 넘어 중국 민간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취재원과 경로를 개발해야 한다.

26) 한국의 한 TV프로그램에서 트와이스의 멤버인 쓰위가 대만의 청천백일기를 흔들었던 사실이 알려지게 발단이 됐다. 쓰위의 행동은 중국 네티즌들의 불만과 반발을 일으켰다. 타이완 매체와 정치인들이 쓰위를 지지하면서 사태는 양안의 정치 갈등으로 번졌다. 얼마 뒤 쓰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대만 대선에서 승리하자 중국 네티즌들이 온라인 행동을 전개했다. 중국의 방화벽을 뚫고 차이잉원과 썬리뉴스, 빈과일보 등 대만 언론의 페이스북에 대량의 댓글 공세를 벌였다. 이 행동을 개시한 바이두 커뮤니티의 이름을 따서 디바 출정이라 부른다.

27) 김태연, 「웁긴이 서문」, 『아이돌이 된 국가』, 갈무리, 2022년

### ③ 애국주의 관방 언론과 혐중 상업주의 언론의 한중 공조

애국주의 소스의 과도한 활용은 중국매체 인용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환구시보를 굉장히 주요 매체인 것처럼 다루지만, 권위 있고 신뢰할만한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환구시보는 중국에서 가장 호전적인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매파적이고 모욕적인 사설로 유명<sup>28)</sup>하다. 상업주의는 환구시보를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환구시보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려는 상업성 강한 신문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sup>29)</sup>

환구시보의 타블로이드적 성격, 통속적·직설적·급진적 애국주의는 한국의 상업주의 언론의 입맛에 딱 맞는 기삿거리다. 주목 경제가 지배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서 민족주의를 쉽게 불러일으키는 반중 이슈는 상업주의 언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 된다. 이들은 혐오와 분노를 키우며 조횃수를 먹는다.

‘문화공정’ 이슈가 생기면 초반부터 한중 네티즌의 대결을 부추기는 온라인 대응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대결구도가 고착화된 후에는 아무리 심층기사를 많이 써도 효과가 반감된다. 애국주의 관방 언론과 혐중 상업주의 언론의 한중 간 공조가 세우는 소통장벽은 만리방화벽 만큼이나 높다.

### ④ 반중정서에 대한 이해와 언론책임의 한계

한국의 청년세대는 온라인에서 중화민족주의로 무장한 이들과 직접 대면하며 중국의 위협을 마주했다. 중국 민족주의의 호전성과 위협을 감지한 한국 청년들에게 중국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됐다. 인터넷 문화 전선에서 싸우는 MZ세대들의 눈에는 중국의 명백한 위협을 보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이상하다. 양국 MZ세대가 반목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언론은 한중수교 이후 교류의 확대가 청년세대에게는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민족주의자들 중에는 반중정서가 확산된 이유가 언론미디어의 왜곡과 조작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반중의 원인을 모두 언론 탓으로 귀결시키려는 시각도 경계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의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행태는 지적해야 마땅하지만 양국이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언론은 이웃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공정하고,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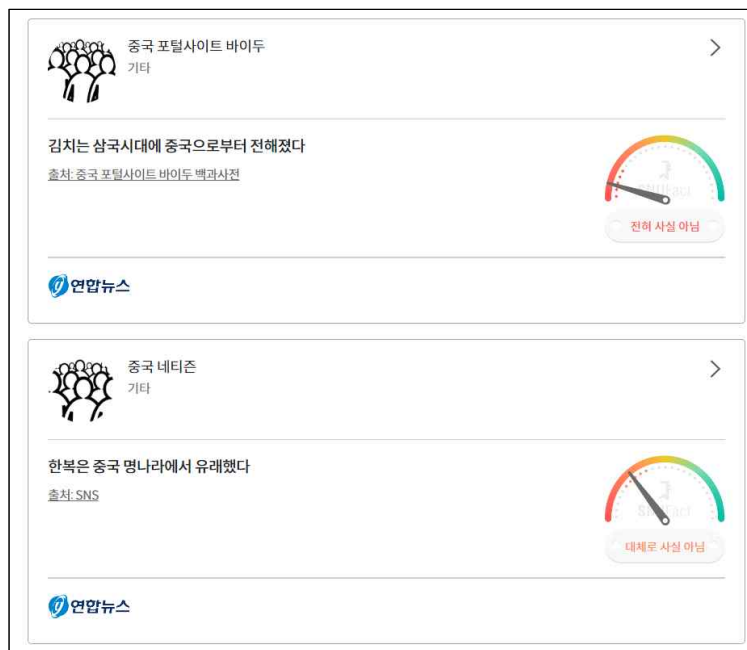
28) Quartz, “Inside the Global Times, China’s hawkish, belligerent state tabloid”

29) 유상철, 「중국 환구시보의 정치학」, 『관훈저널』, 2011.0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중국 언론 가이드라인을 참조.

## ⑤ 원조 공방에서 소통의 위기로 프레임 전환

이웃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인민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혐중은 중국(인)을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고, 중국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 인민들의 고민을 들으려는 관심까지 차단하는 소통의 위기를 낳는다. 혐중은 결코 평화공존을 위한 방책이 아니다.

그간 문화공정과 관련한 팩트체크 보도는 주로 원조 검증 위주로 이뤄졌다. 명백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검증을 해야 하지만, 원조 검증만으로 한중간 꼬인 실타래를 풀기는 힘들다. 기본적으로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기 때문에 기원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기원논쟁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화의 가치를 알고 이용하는 것이며, 개방성을 높여 창조적인 문화로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들은 원조논쟁에 휩쓸리기보다는 양국 미래세대 간 소통의 위기에 주목하며, 문화갈등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애국주의에 과도한 대표성을 부여하는 반대편에는 민간 중국에 대한 무관심과 정보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눈에 보이는 중국이 아닌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중 인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의제들을 발굴하고, 균형 있게 보도함으로써 혐중·혐한의 물줄기를 소통과 교류의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 6) 한푸(漢服) 논란 관련 보도의 재구성

### ① 한푸(漢服) 논란 언론보도를 재구성할 때의 기준

- 한복 원조 논쟁을 따지는 데 그치지 말고 중국에서 왜 한푸 열풍이 불고, 한복=한푸라는 주장이 나오는지 한푸(漢服)현상의 원인을 함께 설명한다.
- 일부의 극단적인 의견이 중국 정부나 중국인 전체의 여론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원조 논쟁에 지나치게 휩싸이지 말고, 한중 인민 간 혐종과 소통의 위기에 주목한다.

### ② 한푸 논란 관련 보도의 재구성

- 재구성할 언론보도 : TV조선 <한복의 원조가 중국 '한푸'?...中 네티즌 한복 왜곡 논란>

(2020.11.12. ·TV조선)

## 한복의 원조가 중국 '한푸'?...中 네티즌 한복 왜곡 논란

[앵커]

BTS의 한국전쟁 관련 수상소감을 두고 때아닌, 중국 모욕을 거론하던 중국 네티즌이 이번엔 "중국이 한복의 원조"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런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가 두려운 건지,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BTS와 블랙핑크, 잇지의 의상입니다.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우리 한복이 때아닌 원조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에서 한복의 원조가 한족의 '한푸'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고 인기시극에서 시녀들이 한복을 입고 등장한 방송분이 sns에서 공유되고 우리 아리랑은 중국 전통 노래로 까지 소개됩니다.

중국인 유튜버

"명나라 황제가 그들(조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명나라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관복을 주로 편집한 영어 콘텐츠는 높은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인 유튜버

"기본적으로 한복이 일찍이 한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한 게임회사는 한국판 출시 기념으로 한복을 아이템으로 지급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에 일주일만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의 관복 등이 중국을 따른 건 맞지만,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윤양노 / 중부대 교수

"갑자기 조선시대에 생긴 옷이 아니에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 기본적으로 여자 복식인 치마저고리가 있었고 남자복식인 바지저고리가..."

SNS에서는 한복의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우리 네티즌들의 한복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

## ○ 재구성한 언론보도

(2020.11.12. TV조선)

한복의 원조가 중국 '한푸'?...  
반중정서 확산 우려

[앵커]

BTS의 한국전쟁 관련 수상소감을 두고 때아닌, 중국 모욕을 거론하던 중국 네티즌이 이번엔 "중국이 한복의 원조"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가 두려운건지~~,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BTS와 블랙핑크, 잇지의 의상입니다.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우리 한복이 때아닌 원조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에서 한복의 원조가 한족의 '한푸'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고 인기사극에서 시녀들이 한복을 입고 등장한 방송분이 sns에서 공유되고 우리 아리랑은 중국 전통 노래로 까지 소개됩니다.

중국인 유튜버

"명나라 황제가 그들(조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명나라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관복을 주로 편집한 영어 콘텐츠는 높은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인 유튜버

"기본적으로 한복이 일찍이 한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한 게임회사는 한국판 출시 기념으로 한복을 아이템으로 지급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에 일주일만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의 관복 등이 중국을 따른 건 맞지만,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윤양노 / 중부대 교수

"갑자기 조선시대에 생긴 옷이 아니에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 기본적으로 여자 복식인 치마저고리가 있었고 남자복식인 바지저고리가..."

중국 학계도 한푸 운동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푸는 민감한 주제라며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복식 전문가는 "한푸는 신조어"라고 말했습니다. "한족의 전통 복장을 뭉뚱그려 '한푸'라고

부를 뿐, 한당·송·명 등 한족 왕조마다 독자적인 복식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한푸가 한족 민족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쎬(張跬) 청년정치학원 교수 : “한푸 운동은 한족의 순결성과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것이며... 한푸 운동은 ‘민족의식의 회귀’가 아니라 ‘민족의식의 퇴화’이며 ‘문화의 자각’이 아닌 ‘역사의 퇴보’(입니다.)”.<sup>30)</sup>

중국 네티즌들의 애국주의 활동이 강해지고, 한국 청년세대와 문화갈등을 빚는 일이 잦아지면 서 반중정서가 커지고, 양국민의 우호정서를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NS에서는 ~~한복의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우리 네티즌들의 한복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

◇ TV조선 기사를 재구성한 배경과 내용에 대한 설명 :

○ 첫째, 대결구도를 자극하는 앵커멘트를 삭제

: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가 부러운 건지”라는 앵커의 애국주의적 멘트를 삭제하여 대결구도를 완화하고,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현상의 원인에 집중하도록 수정했다.

○ 둘째, 중국 전문가의 비판적 멘트를 추가하여 일부 유튜버의 자극적인 발언이 중국의 여론을 대표하지 않도록 수정함.

: 한푸 열풍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나 주류 언론이 한 번도 ‘한복은 중국 것’이라거나 ‘한복은 한푸(漢服)’라고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복 논란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혐중 정서로까지 변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sup>31)</sup> 중국 내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여 문제의 원인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였다.

○ 한복 원조 논쟁 대신 애국주의 대결로 인한 양국 간 혐오와 갈등을 핵심 문제로 제시

: 문화 원조 논쟁에 매몰되면 중국의 애국주의와 패권주의 노선이라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중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혐중을 렌즈를 걷어내고, 중국의 문제를 공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중국의 애국주의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반중정서의 확산을 경계하는 멘트를 추가하고, 제목을 수정했다.

30) 2019.11.04., 중앙일보, <치파오 벗고 한푸 입는 중국...한족주의 부활하나> 기사 인용

31) 2022.02.19., 경향신문, <“젊은 세대 간 소통, 한중 혐오 해소의 길”>

### 문화공정 보도를 읽을 때 체크리스트

•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공정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담겨 있는가	✓
• 어떤 외신을 인용하고 있는가, 매체는 충분히 신뢰할만한가	✓
• 일부 애국주의적 의견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가,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는가	✓
• 분노, 혐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가	✓
• 지면에 게시되거나 방송된 보도인가, 포털과 온라인에만 실린 기사인가	✓
•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는 경우 커뮤니티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라	✓
• 논쟁적인 내용일 경우 팩트체크 기사가 있는지 찾아볼 것	

---

##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 언론미디어 독해법

---

발표\_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 언론미디어 독해법

국제 문제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경계 바깥 세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창이다.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시민들의 생각과 대외인식, 국내 정치 지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때때로 이러한 정치적 요인은 자국 외교 정책에도 변수가 된다. 대중국 정책 수립과 전략 설계에 있어 여론 동향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언론이 중국 사회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보도 기사로 가공해 전달할 때 어떠한 매체를 인용하는지의 문제는 뉴스 성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한국 언론의 중국 보도 흐름

올해는 한국-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여러 행사들에 관한 보도에서 몇몇 언론들은 현장의 매우 냉랭한 분위기를 전달한 바 있다.<sup>32)33)</sup>

한중 관계 속에서 국내 언론의 중국 보도는 시기에 따라 양상을 달리해 왔다. 김원태(1996)는 한중 수교를 전후로 한 국내 언론의 중국 보도를 분석한 바 있다. 수교 이전 중국 보도의 주제는 “외교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밖에 “국내정치와 경제, 스포츠, 군사 순”이었다. 당시 중국 보도는 안기부가 제공하는 기사를 전재하거나, 서방 언론을 재인용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기사의 깊이나 정확도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수교 수립 초기인 1992년부터 1996년 9월까지의 부정적 기사보다는 긍정적 기사가 늘어났다. 양국 간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정보망이 넓어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34)</sup>

한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국내 언론의 중국 보도는 질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갑용-장영태(2018)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언론 매체에서 인용한 『보신(博迅)』의 3,227건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해당 매체의 정보 출처가 불분명하고 불가피하게 익명 정보원에 의존하다보니 발생하는 몇 가지 한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전체 보도의 91%(2,921건)가 정치·사회 사건이고, 대부분 “권력투쟁 및 내부갈등에 집중”하고 있고, “당사자의 사생활에 천착하거나 혹은 내부고발의 관점에서 이를 조망함으로써 공산당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식의 논조를 지닌 기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추측성 기사가 많았다. 물론 언론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중국 사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취재 환경은 좀처럼 보장되지 않는다. 저자들 역시 그러한 근본적 한계를

32)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 따로 열려...양국 정상 불참, 뉴스A, 2022년 8월 24일 보도

33) 한중 수교 30주년... '멀어진' 이웃나라, 연합뉴스TV, 2022년 8월 23일 보도

34) 김원태, '중국문제에 관한 한국언론의 보도성향', <관훈저널> 63호, 1996년 12월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국내 언론들은 다양한 정보원을 발굴하거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정보원에 다가가기보다는 대부분 『보신』의 보도에만 천착했다”고 비판했다.<sup>35)</sup>

주요 언론의 중국 보도에 관한 분석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한계는 대중국 감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최근까지도 변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필청청(2015)은 <신화사>와 <연합뉴스>의 상대국 보도를 비교하면서, <연합뉴스>의 중국 보도가 “서방 매체(외신)나 일부 반체제 중화권 매체가 보도하는 중국의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인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36)</sup> 물론 비공식 매체를 인용해선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비공식 매체를 인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크로스체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서옥란·오창학(2015)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조선일보』의 중국 보도 속 중국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정치/외교와 경제/무역차원에서 바라보는 중국이 있을 뿐 사회와 문화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중국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선일보』의 중국 이미지가 “국가와 시장범주의 이미지로 구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은 중국의 국가와 시장을 중심으로 보도했을 뿐”, 사회 문화나 개인, 환경 등에 대한 보도는 상당히 결여되어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막강한 정치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이미지와 “잠재력이 거대하면서 새로 부상하는 경쟁대상으로서의 시장” 이미지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면서, “중국 사회는 미개하고 한국사회는 선진적”이라는 이분법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37)</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0년 한국 언론의 중국 보도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어왔고,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국내 언론들이 중국의 매체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취재에 대한 투자와 다각도의 검증을 통해 중국 뉴스를 전하지 않으면 상기한 결함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다.

## 중국 언론 환경의 변천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매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로 통치되는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언론관 역시 자유주의 국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역사적으로 중국공산당은 언론의 역할이란 “당의 방침과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당과 정부는 언

35) 양갑용·장영태, ‘한국 언론의 중국 뉴스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와 전략』 통권7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년

36) 필청청, ‘한·중 상대국 보도에 대한 비교 연구 - <신화사>와 <연합뉴스>의 보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논문, 2016년 8월

37) 서옥란·오창학, ‘한국 언론에 그려진 중국 이미지 연구 -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46집, 2015년

론매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고, 언론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하지만 이런 근본 관념을 근거 삼아 중국공산당의 언론관을 곧이곧대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중국공산당의 언론관은 영도자의 관점이나 대중 투쟁, 무수히 많은 필화 사건들이 반복 되면서 변모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가령 마오쩌둥은 “언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치인처럼 신문을 발행하는 사상을 가져야 한다”(1957년)고 강조한 바 있고, 덩샤오핑의 경우에는 “언론 매체가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제 건설을 위해 안정과 단결의 여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쩌민은 언론을 일종의 홍보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후진타오 시기에는 중국공산당의 언론 통제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에 반해 시진핑 시기에 이르러서는 전에 없이 언론 통제가 강화되었다.

여러 매체별로 조금씩 다른 성격과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 역시 이해해야 한다. 더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 언론의 성격은 크게 변화했다. 근본적 관념과 규정에는 변화가 없지만, 경영 논리가 상당 부분 시장화 된 것이다. 1993년 6월, 국무원은 신문산업을 “제3산업”에 편입시켰고, 1995년 5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신문및전파연구소(中国社会科学院新闻与传播研究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신문사업(社会主义市场经济与新闻事业)」이란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신문은 정보산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당-국가와 인민의 매개라는 정치적 역할과 동시에, 이윤 추구를 혼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중국 언론에게 부여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언론들이 관방 매체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이윤 추구를 한다는 점은 매체별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게 한다. 가령 주어진 정치 여건 속에서 최대한 독립적이고 진보적인 색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매체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피하면서도 자신의 진보성과 비판적 지식인에 친화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인문학 콘텐츠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A지역 매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과 깊은 연루를 갖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 언론의 모순성과 양가성,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때때로 중국의 언론들이 보이는 미세한 차이에 대해 외부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 흐름 역시 주목해야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회주의 사상에 근거한 언론의 역할”이나 “언론 매체에 대한 당의 지도와 언론인의 사상 무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중앙인터넷안전과정보화영도소조(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을 신설하기도 했다.<sup>38)</sup> 이처럼 역사적 차이와 지역적 차이, 변수에 따른 차이 등 다종다기하게 얽힌 차이들 속에서 응시하면, 중국 사회의 복잡성에 보다 다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여론을 해석할 수 있는가

38) 來福 & 王一峰, 以「网络安全」为名: 中國網信辦是如何變成一頭巨獸的?, 端傳媒, 2021년 8월 5일



인터넷 여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역시 중대한 문제를 구성한다. 2019년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9억4백만 명으로, 이들의 생각과 세계인식은 세대별·연령대별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상에 게시된 몇몇 화제성 글만으로 14억 중국인의 ‘여론’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BTS를 비난하는 글이 화제에 올랐다면, 그와 동시에 중국 내 18만 명에 달한다는 BTS 아미들<sup>39)</sup>의 옹호 글 역시 마찬가지로 화제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기자가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해 보도하느냐에 따라 14억 인구의 여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국외 여론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내의 한 유튜브는 손흥민의 경기 기록에 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일일이 번역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빈번하게 업로드하는데, 이 영상 속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칭찬과 환호 일색이다. 이를 본 한국인 네티즌들은 “짱X들이 웬 일이나? 역시 손흥민만큼은 짱X들도 인정하나보네!”라고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무수히 다양한 중국인들 중 하나였을 따름이다. 누구도 경향을 읽어낼 순 없다. 앞서 중국 관련 보도에서 ‘중국매체 보도 및 커뮤니티 게시글’ 인용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메시지를 인용 보도한 기사가 80건(18.3%)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중국 관련 보도가 취사선택과 왜곡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최근 일군의 문화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sup>40)</sup> 가령 양귀빈(杨国斌)은 중국 내 사이버 민족주의를 시기별로 분류하면서 과거 사이버 민족주의의 정서가 분노와 우울이었던데 반해, 21세기 ‘디바 출정’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민족주의는 “소비주의에 인터넷 놀이와 장난이 결합”된 ‘유희’가 주류라고 분석한다. ‘소분홍 행동주의’ 혹은 ‘영웅적 민족주의 팬덤’ 등으로 소개되는 민간영역의 인터넷 민족주의는 “관주도 민족주의의 한 형식이 아니”며, “대중이 중심이 된 행위”이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서는 여전히 이런 여론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추동된 것처럼 레퍼토리가 구성돼 있다. 상업주의와 우익 포퓰리즘적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뤄진 소분홍들의 ‘소비자 민족주의’가 중국공산당의 정치 행위와 무관하다고도 단언할 수 없지만, 관방이 직접적으로 추동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내 언론의 중국 네티즌 해석은 지나치게 단순하다.<sup>41)</sup>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국내 언론들의 중국 보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 및 사회 문제에 관한 보도 대부분이 미국·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반중국 정체성을 갖고 있는 중화권 매체나 서구 선진국 주류 매체들만을 인용한다는 점이다. 중화권의 반중 언론들은 뉴스 소스를 ‘익명’이나 ‘내부 소식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실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구 언론들이 매우 빈번하게 인용되는데, 서구 주류 언론들의 탄탄한 취재원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 선진국의 시선을 그대로 수용하

39) BTS in trouble in China over Korean War comments, BBC, 13 October 2020

40) 余滢, 「整顿饭圈：网络治理新风暴之下，监管对自我组织的瓦解」, 端傳媒, 2021년 9월 1일

41) 양귀빈, 「21세기 중국에서 사이버 민족주의의 수행」, 『아이돌이 된 국가』, 갈무리, 2022년

기만 할 뿐, 한국 언론의 독자적인 시각을 가질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상기한 조사에서 “중국의 매체와 플랫폼 인용이 510건인데 반해 외신 등을 인용한 중국 관련 기사는 991건(35.6%/중복)으로 집계” 됐는데, 베이징에서 있던 사실을 뉴욕이라는 거름망을 거쳐 다시 서울로 전달되는 정보 루트가 매우 보편화된 셈이다. 인근 국가이자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온 한반도의 입장에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시선으로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널리즘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발생한다.

## 소결

한국 언론의 중국 보도에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국 언론 매체의 성격과 환경에 대해 다각도로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합리적인 중국 보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보도에 관한 취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언론사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1~4년씩 회전하는 특파원 제도로는 취재 전문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원에서 역량을 축적하고 취재원을 확장해야만 중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나름의 관점을 담아 전달할 수 있다. 관련하여 이흥규·하남석(2014)<sup>42)</sup>, 하남석·김명준·김준호(2021)<sup>43)</sup>는 “한·중 양국 간 ‘허위 보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이는 단지 언론이 아니라, 양국 시민들의 공공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중국 내부의 비판 목소리나 저항, 정치적 사건,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현상 등을 다룸으로써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언론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언론의 비판적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에 근거한 비판은 비판으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심층적이고 정확한 취재에 기반하지 않고 국내에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외 문제에 관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대중의 대외 인식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연스레 국내 정치의 대외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언론이 당장 시민들의 즉자적이고 감정적인 민족주의적 반응에 기대어 조희수 장사에 몰두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시장에서의 이윤 추구 행위에 기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언론으로서의 비판적 기능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근거해 정세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언론 자신의 중국 사회 이해와 장기적인 관점을 갖추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42) 이흥규·하남석,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와 한국의 대응: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 방안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통권67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년

43) 하남석·김명준·김준호, 「한국 청년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의 현황」, 현대중국학회 추계학술대회, 2021년



\* 이 연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